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담당 : 참여연대 오유진 선임간사 010-3266-7406 / 전국민중행동 우동희 정책국장
010-9205-2029 / 전국시국회의 황순식 대외협력위원장 010-9090-8601)
제 목 [보도자료] 국회 정치개혁 단행 촉구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기자회견
날 짜 2026. 4. 14. (총 4 쪽)

보 도 자 료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2026.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만을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시한 마지노선인 이번 주 금요일 4월 17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협조해야 합니다. 5당이 합의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사항은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밤낮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2. 이에 오늘(4/14)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앞에서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은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를 진행했습니다.

▣ 불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 -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 일시장소 : 2026.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2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3 : 최순영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 발언4 : 정춘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발언5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발언6 : 정혜경 의원(진보당)
 - 발언7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발언8 :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로리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선임간사 010-3266-7406 / 전국민중행동 우동희 정책국장 010-9205-2029 / 전국시국회의 황순식 대외협력위원장 010-9090-8601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거대 양당 무관심 속에 정치개혁 시간 다 간다!

지방선거는 **50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30일**이 지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위법한 상태를 **130일**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늦어도 **4월 17일**까지 지방선거제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시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제도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개혁 과제로 국회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만 내리면 될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진척이 없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만을 요구하며 정개특위 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밤낮으로 심의해 신속하게 처리해도 부족한 마당에 예정되었던 정개특위 회의조차 갑자기 취소되는 등 번번이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의석으로도 유의미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우선 상정하는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왔다. **5개** 정당 선거제도개혁 합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에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제도 개혁, 포기할 수 없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은 높고 대표성은 낮아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은 점점 더 강화되어 제8회 지선에서 당선자 전체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에 취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두는 사이, 제8회 지선 투표율은 제7회 지선에 비해 **10%**나 급락해 간신히 **50%**를 넘겼다. 반면 무투표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 이 마당에도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할 개혁과제인가.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정개특위가 공전하는 사이, 자치와 분권의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할 이번 지방선거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모른 채

지하철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으며, 정치개혁의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주요 지역 정당 후보 선출 외에는 유권자의 눈길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대표성의 왜곡,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정치 냉소와 무관심 강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정치개혁 외면하는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개혁진보 **5**당 합의사항은 최소한이다, 지방선거제도 즉각 개혁하라!

2026년 4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